

與 “정기국회서 마무리” vs 野 “독소조항 반드시 폐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2차전

與, 강경과 ‘8인 협의체’ 확정발표
野 “UN 우려표시 항목, 포기해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이다. 논의 범위와 수위를 두고 양측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의 시작부터 여야가 다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언론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꾸린 ‘8인 협의체’ 협의 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황과 별개로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과 측인 김종민·김용민 의원을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인사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의 과정에 있어 쟁점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권 ▲최대 5배 징벌적 손

해배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점 재검토 및 독소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자 “독소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

에서 “협의체와 대화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국제연합)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독소) 조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여야)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등 강경과 인사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데 대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수 부대원,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본회의의 처리 방침을 밝힌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최고인권대표사무소의 수정 권고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상황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보다 국민의힘과 ‘논의 후 처리’ 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영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석 이후에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예정이고 그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내 특위 구성을 마치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윤석열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목표” 의료노조 파업 철회에 “국민 생각해줘 감사”

인터뷰

이진숙 尹 캠프 언론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캠프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언론특보로 영입하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비판 성명을 내었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이란 이유였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회사 임원으로 서 시청자들과의 약속인 방송을 제대로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 재갈’ 말자체 성립 안돼... 증거 제시해야 170일간 노조 파업 ‘광란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목표 정권교체로 글로벌 대한민국 지향”

2012년 MBC의 170일 장기 파업을 ‘광란의 시대’라고 규정한 이 전 사장은 균형을 잡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언론노조의 비판 성명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인에게 재갈 물리던 인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론인에게 어떻게 재갈을 물렸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마 2012년 MBC 언론노조가 170일 장기파업에 나섰을 때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 때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였다.”

“언론노조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내걸고 언론노조가 170일 파업에 나섰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공정방송’이란 것이 어떤 종류의 방송이란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공영언론의 사장들을 그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웠고 그 대다수가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언론노조원들이 170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남아서 일을 하던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렸지만 회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다.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는 사람은 겁박을 당하고, 회사 일을 핑개치고 파업 현장으로 나간 사람은 영웅처럼 행동하던, ‘광란의 시대’였다. 언론노조가 나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연락해왔다. 윤 후보가 좋은 선택을 한 증거가 바로 언론노조의 성명이라고 말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목표다. 언론을 통해 그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윤석열을 통한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기, 그것이 나의 목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文 대통령, 의료노조 협상타결 메시지 “공공의료 강화에 중요계기 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합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K-방역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협상 타결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대통령 입장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정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말 다행”이라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금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 문병원 4곳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제도화 등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형 “南北 군사 합의서 전면 재검토”

외교·안보정책 방향 발표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일 오전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7개의 외교·정책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국방장관이 맺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GP 철수 ▲JSA(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미명 하에 북한의 기습적 적대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

문 대통령은 또 이른바 인명 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의신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에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한 뒤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알뜰 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탄소 배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추진 ▲한미 동맹 재건, 한중 상호주의, 한일 미래지향적 선린관계 구축 ▲혁신강군 정예화 ▲군 급식 민영화,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보훈 체계 개혁 등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과 관련 최 전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